

“북한은 핵무장 남한은 핵분열”

광주 온 이명박 전 시장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20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우리 사회는 또 한 번 분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광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 경영자총연합회 초청 강연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하는 동안 우리는 여론의 핵분열을 겪고 있다”면서 “6.25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맞아 국민이 분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광주는 민주화라는 역사적인 축을 형성한 중흥도시”라며 “정치인들에 의해 소외된 광주·전남을 소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호남지역에 대한 관심을 표실했다.

이 전 시장은 강연 후 전남 해남과 화순을 차례로 방문. 10.25 재보선에 출마한 한나라당 설철호 국회의원 후보와 임근욱 화순군수 후보를 위한 지원유세를 벌인다.

또 오후에는 순천시 초청 시민특강에 참석 한 뒤 저녁에는 광주로 돌아와 호남지역 화자들의 모임인 ‘호남포럼’ 창립식에 참석하는 등 지원유세 틈틈이 바쁜 일정을 소화한다.

이 전 시장의 호남 방문은 재보선에 출마한 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게 1차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호남 민심잡기’ 행보의 하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25 재보선은 정계개편·대선 풍향계”

여야 지도부 주말 호남 총출동

해남·진도, 신안, 화순돌며 막판 표밭갈이

10·25 재보선을 내할 앞두고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 주말과 휴일 해남·진도 국회의원, 신안, 화순군수 등 재·보궐선거 현장을 돌며 막판 표밭갈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이 향후 정계 개편은 물론 나아가 내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산 아래 여야 지도부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당 의장과 김한길 원내 대표·천정배 의원 등 당 지도부와 강기정·유선호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들도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해남·진도, 화순 등지를 돌며 선거 지원활동에 나선다.

김근태 당 의장과 천정배 의원은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뒤 곧바로 해남에 도착, 야간 선거활동에 돌입했다. 김 의장 등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해남을 일대 상가를 방문하며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김 의장 등은 21일 해남 매일시장, 고도리장터에서 지원 유세를 벌인 뒤 진도읍으로 옮겨 선거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신안군수 후보와 함께 20일 오전 신안군 자

은면을 시작으로 7개 면을 순회하며 지역민과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으며 21일 해남, 22일 진도, 23일에는 화순지역을 돌며 릴레이 유세를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20일 광주·전남 경총 금요조찬연수회에서 강연을 한 뒤, 해남과 화순을 돌며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해남·진도 지역은 민주당 채일병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으나 금품 사건이 불거지면서 박양수 열린우리당 후보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다.

화순군수 선거는 민주당 정완기 후보와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각 자신이 박빙의 리드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로 경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안군수의 경우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다 무소속 후보들도 당초 구상했던 연대의 틀이 깨지면서 난립, 민주당 후보가 강세라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은 한화갑 대표의 지역구인 만큼 최영수 후보의 압승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공천에 실망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민심 또한 민주당에 비우호적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측기 광주지방국세청장(맨 오른쪽)이 선서를 하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지역 기업에 세정지원정책 펼쳐야”

광주지방국세청·한은 국감

20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재정경제위원회 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적극적인 세정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원희룡 의원(한나라당)은 “광주·전남지역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한 중소기업인데다 최근 경영여건 악화에 대처하는 능력 또

한 취약해 과세당국의 관심과 세심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은 “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거래 확인조사는 세무조사 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

다”며 “개별 금융거래 조회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조사현장에서 증빙자료 등 중요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광주·전남지역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역자본 역외 유출 방지방안으로 ‘1도 1은행’의 대안을 제시한 뒤 “최근 매각이 거론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회사 소속 광주은행을 지자체와 지역기업인 등이 힘을 합쳐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김정일 “추가 핵실험 안한다”

中 탕자쉬안 국무위원에 밝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19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탕자쉬안(唐家璇) 국무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20일 “김 위원장이 탕자쉬안 국무위원에게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핵실험을 당분간 유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핵실험을 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밤 평양에서 돌아온 탕자쉬안 국무위원이 이날 베이징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평양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도 김 위원장의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입장 표명을 염두에 둔 발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직접 추가 핵실험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지난 9일 북한 핵실험에 이은 2차 핵실험으로 상황이 추가로 악

화될 가능성은 낮아진 반면, 6자회담 재개 등을 향한 새로운 대화 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외교 소식통들은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복귀시키고 핵실험 이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과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측간에 깊은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라이스 장관과 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 국무위원이 평양에서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적어도 북한과 중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고, 모두가 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시 설

광주교육 쇄신할 수 있는 교육감 선출을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후보들이 판세분석과 함께 부동표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3일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광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수장을 선출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4파전 양상의 선거전은 불발·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후보들이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에 전화걸어 지지 지지를 호소하고, 여론조사를 빈지해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금품살포설과 교육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도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선거운동 막판인 주말과 휴일에는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기세를 부릴 것이다.

선거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다. 후보 간 음모설이 제기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져 교육계가 분열될 조짐이 광주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후보 2명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칫 4년 전 교육감선거에서 후보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된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주 교육계는 지금 위기상황이다. 학교 납품비리가 적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고 일부 중·고교에서 부교재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실력 광주’도 위협을 받으면서 시민의 자존심과 명예에 상처를 남겼다.

교육감선거는 광주 교육계의 청렴성을 높이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선거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위원들의 각성이 필수적이다. 후보의 정책이나 능력보다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들은 광주교육을 쇄신할 수 있는 교육감을 뽑는 것이 시민에 대한 의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경기부양책 ‘지방 활성화’에 초점 맞춰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9일 북핵 사태 및 미국 경기 둔화 등으로 내년 성장률 하락이 예상될 경우 거시경제 정책을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상황이 예상치 못히 나빠지면 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세계경제가 미국경제 침체 등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도 침체가 예상된다. 더욱이 북핵이라는 최대 악재가 도사리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경기부양책의 우선 순위다. 경기부양은 통상 건설경기 부양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각

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설사업을 부추김으로써 돈이 돌게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는 방식이다.

하지만, 종전의 건설경기 부양은 단기적인 효과에만 급급해 수도권에 집중됐다. 각종 건설사업이 수도권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시장 왜곡과 부동산 투기 등 부작용과 함께 지방경제를 빈사상태에 빠지게 한 것이다. 정부가 경기를 부양했다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안목에서 지방경제를 살리는데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지방경제가 활성화돼야 국토 균형발전이 이뤄지고, 국가경제도 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기부양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그만큼 지방경제 상황은 심각하다. 경기부양책의 우선 순위가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투자에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20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개성 봉동관에서 열린 개성공단 관계자들과의 오찬장에서 공연을 하던 북측 여성 접대원의 손에 이끌려 분위기를 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개성 간 김근태 의장 ‘출판’ 물의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일부 여당 지도부가 20일 북한 내 개성공단을 방문,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북한 여중업원들과 무대에 춤을 추 물의를 빚고 있다. 김 의장은 “북핵 실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당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날 개성공단 방문을 강행했다.

김 의장 등 여당 지도부 7명은 이날 입주업체 방문, 개성공단관리위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참석 등 공식일정을 마친 뒤 낮 12시 40분쯤부터 공단관리위 관계자들과 공단내 식당 ‘봉동관’에서 오찬을 했다. 오후 1시 15분쯤 원혜영 사무총장이 여 중업원의 손에 이끌려 무대에 올라갔고, 원 총

장은 부채를 들고 춤을 춘 뒤 내려왔다. 이어 중업원들이 김 의장에게 춤을 권했고, 몇 차례 사양하던 김 의장은 이미경 의원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김 의장은 1분여 동안 중업원들과 손을 잡고 춤을 추고, 한 당직자가 무대에 올라와 만류한 뒤 자리를 떠났다.

김 의장은 “그쪽에서 계속 춤을 권해 분위기를 낼 수 없어 몇 차례 사양하다 응했다. 김 의장은 이에 앞서 개성공단관리위 기념식 축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핵무기, 유엔결의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평화공존방안을 떠받치는 두 개의 기둥”이라며 “개성, 금강산이 흔들리면 국제금융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살아날 수도 있다”고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幸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건부 2200-690	사업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팔자 늘어진 사람 딱 한사람 있군

“전국산단 폭발 사고 32% 여수서 발생”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

여수산업단지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벌·평동공단의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도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여수산업단지의 안전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여수 석유화학단지 사고 건수는 국가산단 전체 사고의 12.8%이나 위험성이 큰 폭발 사고는 전체의 31.5%, 유독가스 누출 사고도 20%에 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또한 올해 들어 여수 산업단지에서 3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 GS 칼텍스 등 8개 회사

가 무려 450여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순천시)은 여수산단의 지난해 매출 규모는 37조 원, 수출 규모는 121억 달러, 정부 세수는 5조 원에 이르지만 360억 원의 기업 부담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역 주민들이 이주를 못하고 폐수, 매연 등의 환경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갑원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논의됐으나 기업 부담금 문제로 분방이 거듭되면서 오는 2009년까지 이주가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주민들은 3년간 더 오염지역에 발이 묶이게 된 것은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국가와 지자체도 1,740억 원의 예산을 더 부담하게 됐다고 질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